

# 다시 켜진 '빨간불' 국가신용등급



김 문 호 의

단 상

씨티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예상치 않게 오래 지속되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다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제 정책의 안정성과 효과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계 투자은행인 노무라는 “2월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한 가운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경우 국고채 등 금융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추가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채권 등 한국 자산의 위험 프리미엄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이어 투자은행과 경제분석기관들까지 “국가신용등급 하방 압력 증가”를 경고하고 있다.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면 국채 발행금리가 오르고 기업들 자금 조달 비용이 치솟는다. 외국자본 이탈로 환율이 급등하는 등 여파가 심각하다. 외환위기 이전으로 회복하기까지 14년이나 걸렸을 만큼 복원도 쉽지 않다.

이미 시장 곳곳이 잿빛 그림자다. 정부

는 올해 경제 성장을 전망치를 1.8%로 제시했다. 지난번 예상치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잠재 성장을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 예고다. 내수는 얼어붙고 수출은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지연이라는 정치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경제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영국 소재 경제 분석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제로성장’(0.9%)을 전망했다.

달러당 원화도 1500원을 바라본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유로, 파운드, 위안 등 보다 푸대접이다. 수출, 내수 등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에 대한 국내외의 의구심이 커진 가운데 정치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해 달러자금이 한국을 탈출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경제위기 때엔 원화 가치 하락이 한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경기 회복의 발판이 됐다. 하지만 대기업의 해외 현지 생산과 원자재·부품 해외 의존이 늘어난 지금은 기업의 수익성 악화, 수입물가 상승, 소비 위축 등 ‘나쁜 원저’ 현상이 훨씬 심각하다.

나랏빚도 눈덩이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기업·정부의 부채를 더한 국가총부채 규모는 6222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5배나 되는 규모

다. 추가 경정예산을 생각하면 나랏빚은 더 늘 가능성이 크다. 올해 국고채 발행 한도는 197조 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약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다면 추가로 240조 원(국고채 발행)까지 늘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제와 금융 시장이 흔들리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 부담은 신용강등이라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국가신용등급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재정과 빚 상환능력을 따지기 때문이다.

또다시 국가 신용등급까지 강등된다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시각이 굳어지고, 나라와 기업들의 차입비용이 높아져 중장기적으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보게 된다.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나타났던 환율 1500원 시대가 조만간 닥칠 우려도 적지 않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정치 리스크에 따라 국가 신용 등급이 내려갈 수 있는데 이건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오랜 기간이 걸리고 비용이 너무 크다”라고 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kmh@metroseoul.co.kr

## 부동산 규제의 속도전과 신뢰



기자 수첩

전 지 원  
(금융부)

서울시가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를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불과 두 달여 전 5년간 유지됐던 토지제를 해제했지만 거짓말처럼 뒤집혔다.

거래가 늘자마다 규제를 다시 써운 셈이다. 급등 조짐을 선제 차단하겠다는 명분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투기 수요 억제 효과는 제한적이고 정책 신뢰도 만더 깎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은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생명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거래를 억제하겠다는 목표 외에 어떤 설계도 없다. 해제하자마자 다시 묶고 또 다시 해제할 가능성도 열어둔다.

시장 참여자들은 더는 정부의 방향을 기준 삼지 않는다. 규제를 앞세운 신호보다 실질적인 대출 조건과 공급의 흐름을 따르는 쪽이 훨씬 많다.

강남3구와 용산이 다시 규제 지역이 되자 수요는 강동·마포·성동으로 이동 중이다. 풍선효과는 지난 2020년과 유사한 흐름이다. 거래는 줄고 가격은 오히려 오를 수 있다는 경험이 시장에 깊이 새겨졌다.

실제로 2020년 토지제 지정 당시 거래량은 70% 이상 줄었지만 가격은 대치동 기준 35% 넘게 뛰었다. 규제 하나로 시장 전체를 누르긴 어렵다는 증거다.

이번 조치도 마찬가지다. 실거래 데이터를 보면 가격은 여전히 ‘벼티기’ 중이다. 시행 직전 일부 단지는 가격을 낮춰 거래를 시도했지만 표본수가 적고 대부분은 직거래로 통계의 대표성도 부족하다.

오히려 매수자들은 관망하고 매도자는

버티는 눈치싸움만 심화됐다. 정부가 다시 카드를 꺼냈지만 시장은 이미 그 수를 읽고 있었다. 문제는 신뢰다. 규제는 정책의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 규제의 반복은 시장의 무감각을 낳고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목소리를 공허하게 만든다.

시장은 수없이 많은 규제를 겪었고 그만큼 우회하는 법도 익혔다. 부동산공인중개사 사이에서는 이번엔 얼마나 갈지가 핵심화제다. 정책이 통제 수단으로만 작동하면 시장은 결국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규제는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의 진짜 힘은 효과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 시장은 이미 과거처럼 단순하지 않다. 규제를 반복할수록 시장은 더 똑똑해지고 정부는 점점 설득력을 잃는다. 지금 필요한 건 다음 카드를 내미는 것이 아니라 이 규제의 이유를 묻고 해법을 고민하는 일이다.

/jjw13@

## 김상회의四季

### 그림자 전쟁 세계



그림자 전쟁, 누군가는 전쟁과 전쟁 사이를 가리켜 그림자 전쟁이라고 했다. 대놓고 국경을 넘어선 전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아랍인들의 충돌이 일어난 가지지구처럼 직접적 전쟁이 벌벌 하기도 했지만 전 세계는 알게 모르게 그림자 전쟁중이다. 무기와 종칼을 대동하여 직접적 전투와 살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 문화적으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교묘하게 치러지는 찬탈행위가 바로 그림자 전쟁 아니겠는가? 사실 기업들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윤을 내기 위해 정보싸움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도 뉴스가 되었지만, 국내 기업의 유수한 인력들이 퇴직하면서 경쟁사인 외국 기업에 이직했고, 그 과정에 기술을 교묘하게 빼돌리다 대거 구속된 일이 있었다. 기술 획득을 위한 그림자 전쟁인 것이다. 실제로 상품개발을 위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스파이전을 비롯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보전쟁을 하는 것이다. 특히나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인터넷을 통한 사기행위에 개인들은 물론 사이버 해킹 등으로 기업들도 흥역을 치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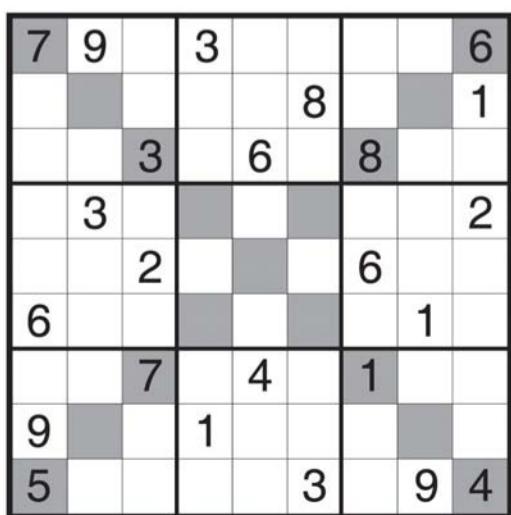
요즘은 로맨스 스팸 방법까지 가세하여 기가 막힐 일들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이 또한 정보화시대의 그림자 전쟁인 것이다. 한 이십 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이 있었다. 필자도 매우 흥미롭게 읽었다. 그 소설은 일루미나티 같은 음모론 속의 조직이 실재함을 주장하고 있다. 어찌 보면 그림자 전쟁을 이끄는 세력체인 것이다. 인생의 그림자 전쟁을 읽는 코드는 무엇일까? 필자는 주역(周易)으로 보고 싶다. 인간의 사고와 행동철학의 바탕이 되는 우주와 천지자연의 생성과 순환이치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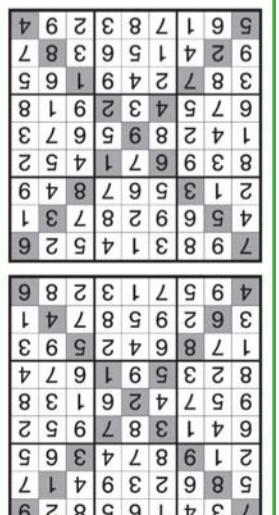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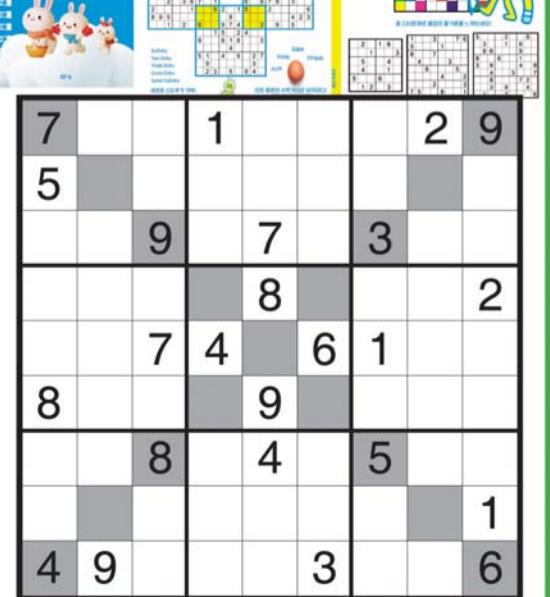
3x3 스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줄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서



###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8. TEL: 02) 721-9800, FAX: 02) 730-1551

발행·편집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 721-9851, 9826 / 02) 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 00206	2002년 5월 28일 제 5644 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 50111	2017년 3월 09일 제 1748 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